

“제로페이를 살려라”…3월 본격 시행



서울시, 전담부서 내 ‘제로페이 활성화팀’ 신설

3개팀으로 전력 보강…민간·공공 협력 추진

던 제로페이 도입 및 서비스 기획, 법령 및 제도 개선, 대외협력, 가맹점 확보 및 관리 등 서울시 내 전반적인 제로페이 사업 진행 과정을 좀 더 촘촘히 관리할 예정이다.

이번에 신설된 ‘제로페이 활성화팀’은 민간과 공공분야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업무를 중점적으로 맡게 된다. 구체적으로 제로페이 단체 이용 홍보 서울시 기관사업 연계 및 협력추진, 제로페이 사용자 확보 추진 등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제로페이 활성화 팀이 추가로 새로 생겼다. 소비자 층면에서 제로페이를 얼마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시스템 개선 측면하고 연계하는 업무를 할 것”이라며 “특히 소비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을지, 공공과 민간분야의 협력을 이끌어내 활성화 하는 업무를 중점적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제로페이 사용을 통한 혜택을 많은 소비자들이 누릴 수 있도록 공공시설 할인혜택 확대, 가맹점과 이벤트 등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체육, 문화시설의 경우 할인혜택을 적용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시가 제로페이 활성화 총공세에 나선 배경에는 기존 업계 저항이 상당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가동할 수 있는 모든 힘을 투입해 오는 3월 본격 시행되기 전에 제로페이를 안착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박 시장은 지난 10일 뉴시스와 진행한 신년인터뷰에서도 이 같은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박 시장은 “제로페이는) 새로운 길을 내는 일이고 모멘텀을 만드는 일이다.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절망과 고통에 빠진 지역업체를 위해 모든 일을 하겠다는 각오로 시작했다”며 “안착하기 쉽지 않은 여건이지만 시범 서비스를 통해 결제인프라, 가맹, 기업 절차, 사용처와 인센티브 등 개선점을 찾고 3월 정식 출범 전까지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제로페이를 사용하면 소득공제 40%, 자차체시설을 이용할인 등 시민들의 호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줄 혜택이 따르다는 점도 보다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업체들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제로화할 수 있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14일 자로 기존 ‘제로페이 추진반’을 ‘제로페이 추진반’으로 변경했고, 부서 내에 ‘제로페이 활성화팀’을 신설하는 등 조치를 확대했다.

제로페이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올 3월 전에 시범서비스 과정에서 사업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하는 카드수수료를 무료로 만들어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준다. 연매출 8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의 경우 제로페이 결제 시 수수료가 0%가 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영세

기업이 제로페이 사업 전반을 총괄하는 ‘제로페이 추진반’은 ▲제로페이 총괄팀 ▲제로페이 지원팀 ▲제로페이 활성화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됐다.

기존 ‘제로페이 총괄팀’과 ‘제로페이 지원팀’의 경우 지금까지 해왔

있다. 내기를 해도 좋다. 가장 간편한 결제방식이기 때문에 보편화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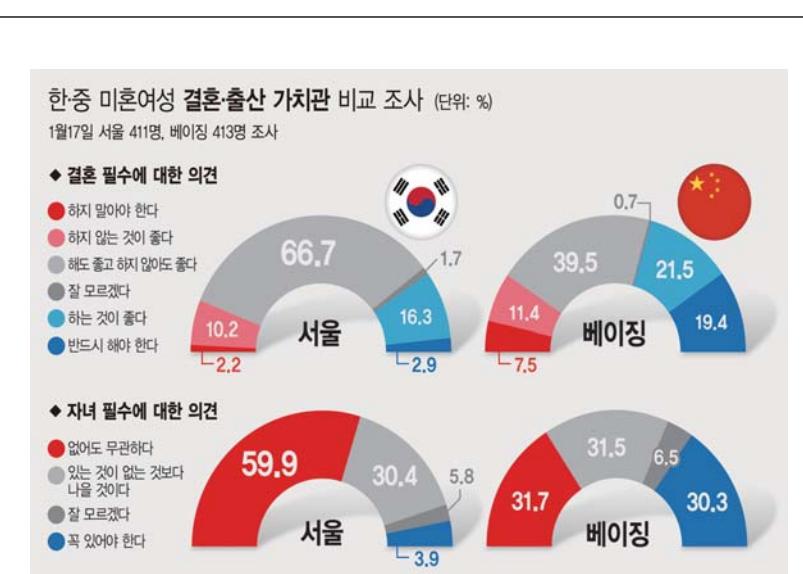
이어 “신용카드 처음에 나왔을 때도 처음부터 잘됐나. 몇 년 동안 다양한 인센티브를 정부 노력이 경주했던 것”이라며 “생각보다 오히려 제로페이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정착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모든 게 처음에는 다 낯설고 익숙하지 않아서 힘들고 저항도 있다. 써본 사람은 금방 편리하다는 걸 알게 된다. 정식 시행은 3월부터다”라며 “대부분 프랜차이즈 체인이다 들어왔다. 지금 내부 시스템 정비하는 중이라서 3월말이면 대부분 끝난다. 그것만 해도 엄청난 변화다. 앞으로 판공비리를 쓸 때도 재래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도 제로페이로 가능한 상황이 되고 점점 더 확대 가능할 기반들이 마련되기 때문에 잘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간담회장에서 직접 제로페이로 결제해서 물건을 구입하는 시연을 했다. 시는 신청사 지하2층 매점에서 제로페이 QR을 직접 들고 왔다.

박 시장은 미세먼지 미스크, 에너지비 등을 구입한 뒤 3850원을 직접 결제했다. 결제를 마친 박 시장은 “편리함에 있어서는 제로페이를 당할 재주가 없다”며 “앞으로 제로페이와 더불어서 공공결제 시민카드도 연결해보라고 지시했다. 제로페이를 안 쓰고는 생활할 수 없는 상태로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서울 미혼여 2.9%만 “결혼은 필수”

서울에 거주하는 미혼여성 중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여성은 100명 중 3명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 베이징의 미혼여성들은 100명 중 19명이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16일 서울과 베이징 미혼여성의 결혼 의향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측은 “한국과 중국은 국가주도의 인구정책을 추진했던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고 현재는 양국 모두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며 “양국 저출산 대책의 핵심의 향후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서울 411명, 베이징 413명의 미혼여성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질문에 서울 미혼여성은 2.9%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베이징 미혼여성은 19.4%였다.

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비율끼리 합하면 서울 미혼여성은 19.2%, 베이징은 40.9%였다. 양국 모두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서울은 66.7%, 베이징은 39.5%였다.

결혼을 하지 않은 이유로는 양국 모두 ‘미망한 사람이나 없어서’가 37.3%로 가장 높았다. 서울의 경우 ‘아직 결혼하기에는 이론 나이라서’가 21.1%, ‘결혼제도가 남편 집안 중심이기 때문에’가 18.0%로 뒤를 이었다. 반면 중국은 결혼 후 생활지출 비용이 높아져서가 20.8%, ‘결혼 생활과 직장일을 동시에 수행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19.1% 순이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계자는

“결혼제도의 가부장성의 비중이 서울 미혼여성들의 결혼하지 않는 사유 중 세 번째로 높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베이징의 경우에는 경제적 문제나 일·가정 양립 등이 비중이 높아 정책적 지원이 가능하지만 가부장적 결혼제도의 경우 정책적으로 해소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출산 의향으로는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는 질문에 서울 미혼여성은 5.8%가 그렇다고 답했다. 베이징은 30.3%였다.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는 문항에는 서울 미혼여성 과반이 넘는 59.9%가 그렇다고 선택했다. 베이징은 31.7%였다.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사유로는 서울과 베이징 모두 자녀 양

한·중 미혼여성 대상 설문조사

中 베이징 19% “반드시 결혼”

자녀 꼭 없어도 돼” 서울 59%

유 및 교육에 많은 비용이 들어서’가 각각 30.1%, 29.7%로 가장 높았다. 서울 미혼여성의 경우 여가문화생활 지향과 직장 내 불이익 우려 등도 이유로 꼽았다.

서울 미혼여성의 경우 개인 생활에 자녀가 장애가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블봄에 대한 공적 지원이 있다 해도 추가 출산 가능성이 낮다는 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설명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오는 17일 오후 2시 본원 국제회의장에서 연구결과를 토대로 ‘중국의 인구정책 변화와 한·중 미혼여성의 결혼 및 출산 가치관 비교’ 학술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뉴시스

박원순, 제로페이 성공 확신…“제가 해서 안될게 있나요”

“가장 간편한 결제방식, 보편화될 수밖에 없어”

박원순 서울시장은 16일 소상공인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부담을 0%로 낮추는 제로페이 성공을 자신했다.

박 시장은 이날 낮 12시 신청사 8층 간담회장에서 출입기자단 신년 오찬간담회를 열고 “제로페이에 대해 우려나 의문을 제기하는 경해와 보도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그럴 만한 근거도 있다고 생각한다. 보시다시피 제가 시작해서 잘 안 된 건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제로페이는 결제 카운터에 비치된 제로페이 QR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인식해 결제금액을 입력하면 내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금액이 이체되는 모바일 거래로 결제 시스템이다.

연매출 8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의 경우 제로페이로 결제시 수수료가 0%가 된다. 사실상 거의 모든 영세

기업이 제로페이 사업 전반을 총괄하는 ‘제로페이 추진반’은 ▲제로페이 총괄팀 ▲제로페이 지원팀 ▲제로페이 활성화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됐다.

제로페이 사용을 통한 혜택을 많은 소비자들이 누릴 수 있도록 공공시설 할인혜택 확대, 가맹점과 이벤트 등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체육, 문화시설의 경우 할인혜택을

제로페이로 결제해서 물건을 구입하는 시연을 했다. 시는 신청사 지하2층 매점에서 제로페이 QR을 직접 들고 왔다.

박 시장은 미세먼지 미스크, 에너지비 등을 구입한 뒤 3850원을 직접 결제했다. 결제를 마친 박 시장은 “편리함에 있어서는 제로페이를 당할 재주가 없다”며 “앞으로 제로페이와 더불어서 공공결제 시민카드도 연결해보라고 지시했다. 제로페이를 안 쓰고는 생활할 수 없는 상태로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완도군 eShop

완도군 공식 농·수산물 쇼핑몰

완도군 특산품관

WANDO COUNTY

전국제일의 청정바다에서 생산된
전복, 김, 미역, 멸치, 다시마 등
자연 그대로의 맛과 신선함!